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학술대회

## -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2019년 7월 3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회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담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영일(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 행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시대 대응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 한국공법학회, 한국 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 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와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대한 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이라는 주제로 박정훈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박정훈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충칭에 소재하였으나 규범적 사실로서 한반도의 정부였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법은 임시헌장 아래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 대한민국임시관제, 국채통칙 등 정부조직법과 행정작용법을 각각 제정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 법치행정과 민주행정법의 뿌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기조발제가 끝나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오후에는 총 13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가 5개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사회행정법, 다문화시대에서의 행정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중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임시허가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사업화 길을 열어준 이후에는 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세션은 환경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중 ‘대한민국 행정법 100년과 지방자치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발제를 맡은 김수진 인천



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법의 연혁을 고찰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지적하면서,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3세션은 토지공법제도에 대한 3가지 세부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4대 원리(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사업인정의제제도의 폐지 등 2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4세션은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임시정부의 법체계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된 정부조직법제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법령의 체계와 형식을 소개하였다. 제5세션은 비교법과 국가법학, 유럽법원의 판례경향에 대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가법학의 위기와 공동선 개념의 부활로 인한 국가론의 재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가의 본질, 임무, 책임, 공동선 등에 대하여 국가법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학술회의가 끝난 후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는 행정법의 일반법전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는 필요최소한의 규범,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행정 제도가 담겨야 하며, 현행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가 끝나고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 2명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학회별로 추천을 받은 전문가(김국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외 6인)들의 강평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 행정법 관련 학회 회원과 법제처 공무원,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을 비롯하여 행정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과거 행정법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 행정법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법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담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